

### HBM의 아버지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전북 미래산업 비전 제시

# “피지컬AI의 꿈, 현실로 만들어야”

“환상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전북이 피지컬 AI 산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HBM(고대역폭메모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정호 교수(사진)가 전북의 미래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교수는 17일 전주에서 열린 이원택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초청 특별강연을 마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전북은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며 “도민과 정치권,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피지컬 AI 산업을 육성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AI 패권 시대 반도체가 미래다. 김정호 교수와 함께 그리는 전북의 도약”의 주제로 반도체 산업혁신 전망과 세계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전북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피지컬 AI가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제조업과 로봇, 반도체, 센서, 데이터가 융합된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북도민과 인수위원회, 그리고 이원택 신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새 도정이 AI와 반도체 산업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 “제조업 · 로봇 · 반도체 등 융합된 미래산업 핵심 산업 전반 체계적으로 설계해 경제적 성과로 연결”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가 17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이원택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는 점을 직접 느꼈다”며 “이 같은 열정은 지역 발전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냉철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투자 효과를 수치적으로 검증하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경제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컴퓨터, 메모리, 센서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급적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수익 창출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전북의 기업들이 다른 지역 기업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직면한 전력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풍력과 태양광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대규모 첨단산업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원자력 발전이 어렵다면 LNG 발전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

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AI 기술 발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대부분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문서 작성, 자료 조사, 사무 자동화 단계”라며 “제가 강연에서 강조한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는 이제 막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 ‘도민 AI 교육’을 꼽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전국적인 컴퓨터 교육을 통해 정보화 시대를 앞당겼듯이 이제는 반드시 도민의 AI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청과 각 시·군, 학교가 함께 나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먼저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에이전트 AI와 바이브 코딩까지 익힌 인재들이 늘어나면 그 변화가 시민과 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조직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면 지역이 바뀐다. AI를 이해하는 도민이 많아질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이 좋은 기업 유치와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진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전북 지역 경제를 키우는 승수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소상공인 목소리를 담다”

### 전주시장직 인수위, 전주 소상공인 간담회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의 인수기구나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가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며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

위원회 산하 기업친화도시 전주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수 전주대학교 부총장)는 17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주시역 소상공인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가치인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기업 친화도시 전주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현장 소통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위원회는 골목상권을 의미하는 소상공인을 지역경제의 싹싹줄로 보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민선 9기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조지훈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한 정책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주요 의제로는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경영 혁신을 의미하는 AX(AI Transformation) 전환 지원,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건의했다. 박경훈 GT 대표는 “도도상에 많은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만큼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상가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은 만큼 관련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니어 재창업과 청년 일자리를 연계한 전주형 일자리 모델 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기업친화도시 전주 특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민선 9기 정책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특위 활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 제13대 전반기 도의회 의장 도전자들의 포부

### 이명연 “도민께 성과로 답하는 의회”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부의장이 17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3대 전반기 도의회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부의장은 “도민에게 신뢰받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의정 혁신을 약속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 출마 서류를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한다며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가 의회가 있어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제는 설명이 아니라 성과로 답해야 할 때”라며 “잘 보이는 의정이 아니라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의정이 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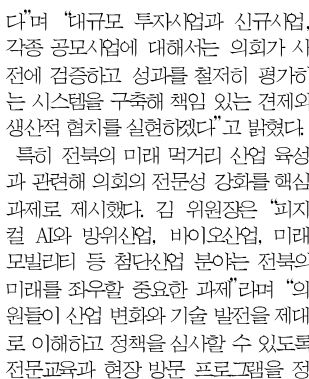
이 부의장은 “오랜 기간 지방정치를 하며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지방

의회가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였다”며 “의회가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대중 “견제 · 균형 바로세우겠다”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이 1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의 균형을 바로 세우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가 기준이 되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방선거 이후 전북도정과 도의회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한 정책은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고 잘못한 정책은 예산과 행정, 사업 추진 과정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며 “대규모 투자사업과 신규사업,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사전에 검증하고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책임 있는 견제와 생산적 협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관련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피지컬 AI와 바이오산업, 바이오산업,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며 “의원들이 산업 변화와 기술 발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 “무용론, 의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이를 위해 이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상임위원회 추가 신설 등 세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체계 속에서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예산 독립성과 조직·인사 자율성 전문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집행 결과와 성과까지 공개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참여예산이 일부에서 의원들의 ‘뽑기용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공

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추가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의원 정수가 44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5개 상임위원회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위원회는 업무가 과중되고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임위 기능을 세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또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과 현대자동차 부지, 피지컬 AI 실증단지 구축, 제3공용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만호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

###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17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스스로 조사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노동부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해 사용자도 조사를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해 사용자도 조사를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누구든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조사받아야 한다”며 “노동자가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정부 제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 추진 중단으로 존치 명분 상실돼”

### 권요안 도의원 “김관영 도정, 건의문 즉각 철회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제4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 예산안 정책질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회합을 우선하겠다는 새로운 도정의 의지이자, 무엇보다 완주군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정이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통합 건의문은 사실상 정책적 전제를 상실했다”며 “도지사 당선인의 입장과 도정 방향이 바뀌었음에도 건의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적·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지난 민선8기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였지만 통합 추진 과정은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를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며, “민선8기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완주군 통합반대대책위원회의 천막이 철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통합 추진 과정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최근 민선9기 도지사 당선인이 완주·전주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권 의원은 또한 “통합 건의문이 존치되는 한 완주군민들은 언제든 통합 논의가 재접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립과 불신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전북도는 더 이상 완주군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조속히 철회하고, 주민 의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이제는 통합 논쟁을 끝낼 때”라며 “완주군민의 선택과 뜻을 존중하고, 그동안 누적된 갈등을 통합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집행부 거수기 아냐… 의회 전문성 강화가 핵심 과제”



소외감이 적지 않았다”며 “이제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닌 균형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아 예산과 정책이 전북 전역에 고르게 당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